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미래전략연구부 김동영 연구위원
(063-280-7174, 010-4121-1210)
- **담당실장**: 기획조정실장 김보국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61)

보도시점 : 2017년 5월 23일(화)부터

문재인정부 출범 전북 6대 후속과제 제시

전북연구원, 전북공약 7대 분야 후속대응과 함께 이슈브리핑 발간
국립사회서비스공단, 농생명 4차산업전진기지 등 신정부 정책대응 필요

-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문재인정부 출범에 따른 후속대응전략으로 '신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 발전전략' 이슈브리핑을 오는 5월 23일(화) 발간했다.
- 전북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4대 비전 12대 약속을 분석한 후 전라북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기조로 ▲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마련, ▲신성장동력으로써 4차산업혁명대응, ▲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, ▲재난재해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국민안전, ▲문화균형발전을 위한 문화관광, ▲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복지·저출산 등 6대 정책 키워드를 제시했다.
-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맞춰 공공부문 일자리의 국가적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사회서비스공단(가칭)의 전북설립, 4차산업 창업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확대,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농생명 4차산업 전진기지육성, 미세먼지 대응 서해안권 종합안전 모니터링센터 설립, 문화와 관광자원의 신성장동

력화,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정책 등에 따른 재정부담완화 건의 등 국정기조에 맞는 전북사업이 추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- 전북연구원은 또한 대통령 선거 당시 전북공약으로 채택된 7개 분야 10대 과제 23개 사업에 대한 분야별 후속대응을 제시했다.
- 첫째, 「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」의 명칭을 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, 협력과 혁신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'국가농생명혁신네트워크센터'를 구축하여 국가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.
- 둘째,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'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'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화금융중심지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도시에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.
- 셋째, 탄소특화국가산업의 경제성 및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소소재 수요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탄소산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 소재 탄소산업 관련 기관들의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.
- 넷째,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 부서의 설치 및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추진시 개발방식을 국가주도 매립으로 변경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.
- 다섯째,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예산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해 「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특별법」의 공동추진에 협력해야한다.
- 여섯째, 무주-대구고속도로는 정치·문화·사회적으로 온도차가 있는 전북-경북의 거리적인 우회를 줄이고 양 지역의 상생과

SOC 공급을 통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구간 동시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해야한다.

- 일곱째, 조속한 시일 내 정부 공공선박펀드 및 잔여펀드를 조기에 발주하고 이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함으로써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마중물 역할 하도록 하고 또한, ‘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’ 신설을 통해 해운선사의 신조 발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일조해야한다.
- 강현직 원장은 “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과거정부를 타산지석삼아 정권 초기 국정과제화 될 수 있도록 다당구조 하에서의 지방정부와 정치권과의 공조와 지역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